

#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에 근거하여

정 윤 태 · 김 원 철 · 김 학 만

##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을 사회복지정책의 틀로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착지원 현황과 민간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적응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에 관한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로서 제시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중 Gilbert와 Specht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을 구조-과정-결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경제적 지원, 사회보장제도 등의 생활안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민간부분은 보다 심리·사회·문화적인 실천적 적응체계로서 지역정착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정”의 측면에서는 지원의 한계성에 중점을 두어 논쟁하기보단,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상 문제로서 정부의 자립·자활의 지원방향을 실천하려면 정부-민간의 이원적 지원주체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업-민간의 3자가 보다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민간지원, 서비스전달체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북한이탈주민<sup>1)</sup>의 급속한 국내유입에 따른 정착은 최근 주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1)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탈북자라고 불리웠으나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어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2008년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통일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 1천명 단위로 입국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 이르러서는 2천명 단위로 입국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sup>2)</sup>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예측 가능한 사회위험으로 변화시켜 안정화된 국내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다각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태수, 2009).

정부는 지난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6년 7월과 2009년 7월 법률개정을 거치며 수혜적 보호차원의 일방적 지원에서 자립·자활중심의 정착지원으로 방향성을 변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3월, 전국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사회·경제적 적응 과정을 돕고 있다(통일부, 2010b).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종합상담을 위해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평가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정착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착지원체계를 넓히고 있다(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안정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원혜영, 2010) 이 외에도 심리적인 부적응, 사회문화적 부적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다(윤인진, 채정민, 2010).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부적응 문제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민간의 책임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듯 민간지원이 정부지원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며 영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발전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전달되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맞추어 지원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부적응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분야로 주제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도와 만족도 등을 위주로 조사 분석한 것이고(김미령, 2007; 김성모, 2008; 원혜영, 2010; 윤인진·채정민, 2010; 통일부, 2010), 둘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정착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박현선, 2002; 김치영, 2003; 김선화·박연희, 2007; 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그러나 지원정책과 제도를 분석한 기존의 연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매일경제 2011년 5월 14일 기사(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4월 17일까지 집계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1,165명으로 집계되었다.

구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정책을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정부와 민간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민간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송근원, 김태성, 1998). Gilbert와 Specht(Neil Gilbert & Harry Specht, 1974)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을 제시함에 있어서 전달체계를 형태에 대한 측면과 전달방법에 대한 측면, 그리고 평가에 대한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전달체계의 형태에 대한 부분은 지원의 주체와 더불어 조직과 인력의 측면을 포함하는 ‘구조의 문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전달방법에 대한 것은 ‘과정의 문제’로서 전달체계가 얼마나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누구에게(대상) 어디까지(서비스내용) 지원을 해야 하는가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측면은 ‘결과의 문제’로 자립·자활이라는 정부의 지원방향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와 정부와 민간지원체계는 서비스의 중복 없이 잘 조정되어 제공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lbert와 Specht(Neil Gilbert & Harry Specht, 1974)의 분석틀<sup>3)</sup> 중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지원체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남북한 통합의 예비모델과 더불어 소수집단을 위한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박현선, 2002), 통일세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민간지원체계의 발전방안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Gilbert와 Specht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에 근거하여 구조-과정-결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착지원실태를 살펴본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로써 파악하여 우리나라 민간지원체계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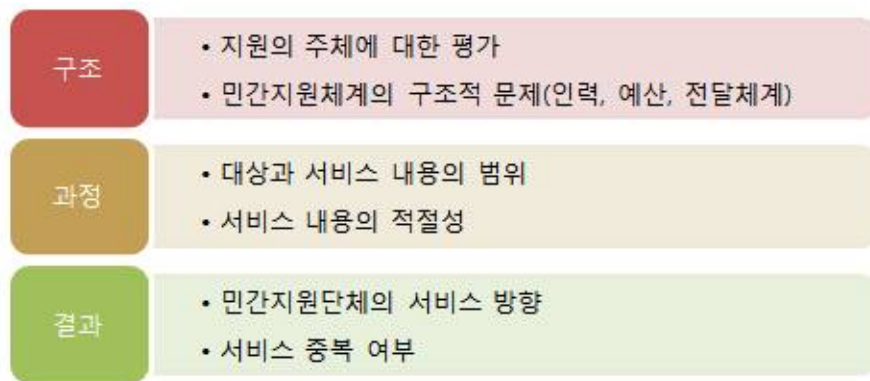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방법과 함께 최근 각종 통계지표를 활용한 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정착 지원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민간 지원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인식도와 만족도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민간지원체계에 대한 분석틀은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구조-과정-결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보

---

3)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재정,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특히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전달체계를 형태에 대한 측면과 전달 방법에 대한 측면, 그리고 평가에 대한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태에 대한 측면은 조직과 인력 등의 구조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참여정도를 지표로 분석하였다. 전달방법에 대한 측면은 대상과 서비스 내용, 그리고 목표 달성 등 과정에 대한 측면을 반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측면은 결과에 대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의 중복정도와 정책방향의 달성정도를 지표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민간지원체계 분석의 틀



[자료: Gilbert와 Specht( Gilbert & Specht, 1974)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을 재구성]

## II.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현황과 민간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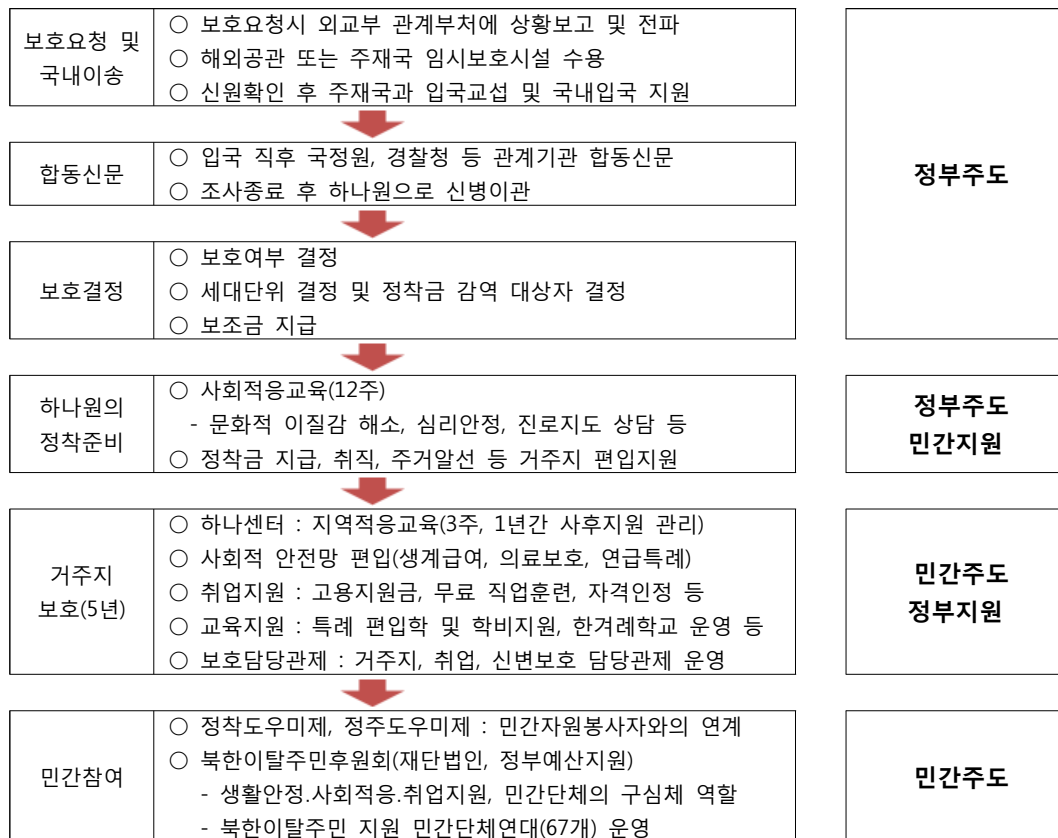
### 1.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의 이해

통일부(2009)에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요청으로부터 안정된 국내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응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합동신문과정이 끝나고 보호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여러 가지 지원체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원에서 12주 과정의 정착준비를 시작으로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으며 이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체계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따라 정부주도형, 정부주도 민간지원형, 민간주도 정부지원형, 민간주도형의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자립과 자활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정착지원체계를 하나원의 기본 소양교육 이후로는 민간이 보다 기능할 수

있도록 거주지 중심의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분류한 4가지 분류체계로 나누어본다면, 합동신문과 보호결정까지의 정착 초기에는 정부주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나원에서의 12주간 기본 사회적응 교육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민간이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거주지 보호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하나센터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정과 정부 및 민간의 역할



<표1>에서 살펴보듯이 정착초기에는 정부주도의 역할이 강하지만 하나원에서의 기본 12주간의 소양교육 이후 거주지 보호단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다양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통일부(2010a)에서 발표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 편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적응을 위해 자원봉사자, 지역의료기관, 가족복지기관, 아동청소년복지기관 등 정부와 협력 또는 지원을 받는 민간의 영역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이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보완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민간의 고유기능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감시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의 민간위탁이 늘어감에 따라 민간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주체성이

결여된 체 사업수행의 전달체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2. 민간지원사업 실시 배경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러하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지원사업 역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이외에 심리·사회·가족·문화적인 다양한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즉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는 주로 주거와 기초생계(의료보호) 및 정착금 지원, 직업훈련지원 및 교육지원, 보호담당관 및 정착도우미 배치 등 기초적인 제도적 지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배경이 전혀 다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욕구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민간단체들이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민간지원사업의 흐름은 다음의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초창기 기관들의 개별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오다 민간기관사이의 연계성과 정부와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다(김동배, 이기영, 1999). 둘째, 정책방향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초점을 두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 정부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타 사회구성체계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클라이언트 집단을 옹호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동배, 이기영, 1999). 하지만 문제는 민간단체는 구조적 문제-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공-민간이 상호 협동적인 관계 속에서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지원사업의 형태로 체계가 나아가고 있다. 즉, 정부의 기본방향 아래 재정적 부담은 정부가, 서비스의 전달은 민간이 실시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큰 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시와 견제라는 민간의 고유기능이 정부의 지원 하에 다소 정제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 즉 경제적 지원, 사회보장제도 등의 생활안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민간부분은 보다 심리·사회·문화적인 실천적 적응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민간이 지원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간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간지원체계를 민간지원의 중심인 북한이탈주민 민간지원연대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재단법인의 형태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의 민간위탁 형태인 하나센터와 정착도우미제도, 전문상담사제도를 통해 민간지원체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67개 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sup>4)</sup>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5)</sup> 민간단체연대는 지역복지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정착지원분과, 해외분과의 4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김선화, 2009). 아래 <표2>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의 분과별 주요사업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의 분과별 주요사업

구분	단체특징	주요활동내용	주요단체
지역 복지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복지관 중심</li> <li>■ 전국적으로 분포</li> <li>■ 거주지 밀착형 지원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부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센터 운영</li> <li>■ 사업내용 : 정착도우미 사업,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아동 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 학습지원, 대학생 입학지원 및 대학원 지원, 진로지원 및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사회적응지원,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통합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원구 : 공릉종합사회복지관</li> <li>■ 강서구 : 가양7,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li> <li>■ 양천구 : 한빛종합사회복지관</li> <li>■ 대구 : 북한이주민지원센터</li> <li>■ 부산 : 물운대복지관</li> </ul>
아동 청소년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학교</li> <li>■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li> <li>■ 검정고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학교 운영 : 기숙형, 도시형 학교 운영</li> <li>■ 무연고청소년 생활공동체(그룹홈)</li> <li>■ 방학중 학습지원사업</li> <li>■ 대학적응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형 대안학교 : 하늘꿈학교, 한꿈학교, 한울학교, 지구촌고등학교</li> <li>■ 도시형 대안학교 : 셋셋학교, 여명학교, 자유터학교</li> <li>■ 무연고청소년생활공동체 : 우리집, 꿈사리 공동체</li> <li>■ 초등 방과후 학교 : 한누리학교, 사회복지관</li> </ul>
정착 지원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의 설립목적을 반영한 특정영역의 정착지원 사업</li> <li>■ 전국규모단체다수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정착도우미사업 시행</li> <li>■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li> <li>■ 전문상담사 육성사업</li> <li>■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활동 및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적십자사</li> <li>■ 자유시민대학</li> <li>■ 부산 YWCA</li> </ul>
해외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탈북자 지원</li> <li>■ 탈북자 인권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탈북자 지원, 해외탈북자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활동</li> <li>■ 해외탈북자 인권 옹호활동 및 탈북자 보호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인원정보센터</li> <li>북한인권시민연합</li> </ul>

[자료 : 김선화. (2009). 민간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스템.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엄 자료집」. 89~106. 내용을 수정보완]

- 4)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된 국내외의 24개 단체와 연구자들이 모여 1999년 11월 3일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06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현재 67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 5)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단체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써 열매나눔재단(<http://www.merryyear.org>)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체계에서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은 되어 있으나 정착단계에서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개입하여 정부의 지원체계를 보완하거나 지원하여 제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를 통해 각각의 다양한 단체들의 역할 중복을 피하고 상호 정보를 제공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실시하여 정부주도적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오정수,류석진, 2009). 따라서 특정한 지역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지역사회복지관은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범주를 분류해보면 초기정착 지원, 정신건강지원 및 심리상담, 사회적응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대학생 교육사업, 취업 및 진로지원사업, 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인프라구축, 기타 대상자별 특성화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선화, 박연희, 2007). 그러나 모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통일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김윤하, 2003).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회복지관의 새터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단위영역	세부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초기정착 지원 및 사례관리	정착도우미 사업	자원봉사자 배치, 1년간 정착지원
	사례관리	정착초기단계 및 요보호 새터민 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경제적 지원(장학금), 긴급지원,밀반찬 배달 등: 의료서비스 및 명절(생필품) 지원, 무료결혼식
정신건강 지원 및 심리상담	임상사례관리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새터민의 생활지원
	심리상담	정착초기 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 상담
	정신건강 예방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가족의사소통교육 및 가족치료: 정신건강 교육(홍보) 및 치료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남한 문화에 대한 체험 지원
	새터민 융화 프로그램	체육대회, 송년행사, 야유회 및 캠프: 새터민 자조모임
	가정결연 프로그램(멘토링)	남한주민과의 통합 및 사회적응 지원
	성인새터민 교육지원사업	기초 학습 및 적응에 필요한 교육
아동,	아동공부방	새터민 전담 방과후 교육/부모교육



청소년, 대학생 교육사업	청소년 학습 멘토링	자원봉사자 배치 1:1 학습멘토링
	대학생 지원사업	대학진학상담, 재외국민 특별전형입시 설명회, 예비대학교, 캠퍼스 멘토링
	문화체험활동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
취업 및 진로지원 사업	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	시장경제교육 및 직업훈련상담: 취업 및 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구직지원(취업알선)	맞춤 취업알선, 취업후 직장생활지원
지역사회 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인식개선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지역대표, 지역주민, 대학생 등의 국민인식전환을 위한 행사
	새터민 봉사단 활동	남한주민들을 위한 새터민 봉사단
	지역주민 조직과의 네트워크	부녀회, 통반장 모임 등과 새터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및 통합
지역사회네 트워크 및 인프라구축	지역내 새터민 지원기관 간담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동: 보호담당관 간담회
	새터민지원 자원봉사단 구축	정착도우미 및 학습지원 자원봉사자: 각 영역 전문봉사 활동
	지역내 영역별 네트워크 구축	의료, 교육, 정신건강, 취업 네트워크
대상자별 특성화 사업	새터민 고령자 지원	고령 새터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새터민 여성지원	여성 새터민 욕구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자료 : 김선화·박연희. (2007). 새터민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성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초기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의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의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성을 고려한 일반적 계층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고유한 특성과 욕구에 맞춘 지속적·미래 지향적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김윤하, 2003). 김성모(2008)의 조사연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도는 중간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사업이 지속적이지 못해 일관성이 없는 지원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자립과 자활이라는 방향성 하에 거주지 중심의 정착지원체계를 이루고자 한다면 지역사회복지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활로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거, 1997년 8월 18일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설립되어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퇴소 이후의 정착과정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맞는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정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sup>6)</sup> 2010년 3월 법률을 개정하였고 그해 11월 2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였다.<sup>7)</sup>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형식상 기타공공기관<sup>8)</sup>에 속하며 실제로는 정부나 통일부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사회적응 지원사업으로 정착도우미사업, 주택 미배정자 및 무연고 청소년 생활시설 운영,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사업으로 기업대상 취업촉진 및 사회적 기업 컨소시엄 설립지원, 직업능력개발,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지원 및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과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채널 운영, 북한이탈주민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4) 기타

#### (1) 하나센터

하나센터는 하나원 퇴소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적응 교육을 실시하고자 2009년에 3개 지역(서울북부, 경기서부, 대구)에서 시범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의 하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나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화된 One-stop 서비스 기관으로 하나원 수료 이후 1년간 거주지 편입절차(동사무소 편입 및 임대아파트 계약 등)부터 취업 알선 및 직장 적응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사후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김연희는 하나센터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첫째, 하나센터가 현재의 초기 적응 중심의 서비스로부터 보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중장기적 서비스로 발전해야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둘째, 하나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언으로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취업 및 창업지원체계에 대한 지원확보, 그리고 지역사회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통일부, 2010b).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브로셔 내용임

7) <http://www.dongposarang.or.kr/introduction/system.php>

8) 재단·협회·국립대학병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말함. 대한민국에는 2011년 1월 현재 176개 기관이 지정되어있음

## (2) 정착도우미 제도

정착도우미 사업은 최초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정착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기존의 보호담당관(신변/취업/거주지보호)의 업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되었다. 2007년 서울 송파구에서 시범운영된 이래 2010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0년 현재 대한적십자사(14개 지사) 및 하나센터(4개), 종합사회복지관(6개) 등 24개 단체 소속 자원 봉사자 총 2,30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 밀착형 정착지원체제로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하나원 신병인수, 가정방문, 전화상담,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가까운 이웃’으로의 역할 수행이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계약/입주절차, 아파트 이용안내,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안내, 가계부 작성법,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9).

## (3) 전문 상담사 제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는 201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 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상담사들은 상담관련 학문분야 전공자를 비롯하여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해당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전문 상담사의 역할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지원, 셋째, 구직수요자사, 취업·진로지도 및 의료연계 등 자립·자활지원, 넷째, 지역협의회 참여 및 커뮤니티 구축·운영 지원, 다섯째, 상담실 운영 및 상담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파악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2010).

이상에서 정부의 민간위탁 형태인 하나센터, 정착 도우미제도, 그리고 전문 상담사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지원체계이다. 그러나 민간지원체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지역사회복지관과 이들 체계의 중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을 찾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지, 하나센터를 찾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지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와 같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상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III.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민간지원체계 분석

## 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표4>와 같이 6개의 선행연구조사를 분석

하였다. 이 조사들은 각각 다양한 지표와 대상,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사되었지만 모두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를 알 수 있도록 만족도, 사회적 적응정도, 의식(인식)도 등을 묻고 있다. 이 조사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응실태에 대한 정도와 추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4>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조사연구 비교목록

연구자	조사 주제	조사시기	표본수
김미령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2003년	171명
김성모	새터민의 사회적 적응	2006년	84명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북한이탈주민 의식 및 생활만족도 패널연구	2001년 ~2007년	106명
원혜영	새터민 의식조사	2010년	319명
윤인진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정책실태조사	2010년	1,200명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2010년	1,200명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건강 등의 현재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김미령(2007)<sup>9)</sup>이 실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중간점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성향을 보였다. 김성모(2007)는 2006년에 북한이탈주민 84개 가정을 대상으로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생활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우택 등(2007)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3차례 실시한 패널연구에서 분석한 생활만족도에서는 앞의 조사연구와 달리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남한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0)가 전국의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남녀 북한이탈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2010년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41로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50.9%가 보통이라고 보고하여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조건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7.5%가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정책에서 어려워하는 점을 파악해보았다. 윤인진과 채정민(2010)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남녀 북한이탈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사회문화 적응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국내 정착에 대한 적응은 5점 척도에서 3.33을 보여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소통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소득과 수입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으로 인해 심리적 어

9) 김미령은 2003년 171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중 취업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은 이전 연구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김성모, 200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9). 민주당 원혜영 의원(2010)이 실시한 조사자료에서도 질병상해(26.6)와 더불어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가장 많이 호소(25.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건강상태는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했다가 중단하는 사유 중 많은 비율이 건강상의 문제라고 보고하고 있다(신미녀, 김병욱, 2009;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0)

## 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관련 문제점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현재 삶의 만족도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국내정착과 관련된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차로 여성과 아동의 탈북자수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성인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연구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며 만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 프로그램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김미령, 2007). 둘째, 낮은 언어와 정보습득의 어려움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가 있음을 호소한다. 즉, 남한에서 사용되는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러한 요인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은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전우택 외, 2010).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국내정착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취업 등 경제적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등 경제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체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의료지원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신미녀, 김병욱, 2009).

## 3. 민간지원체계에 대한 분석-구조,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이상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체제와 더불어 민간지원체제를 살펴보았고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처음의 연구 질문으로 돌아가 현재 지원되는 민간지원체제를 구조-과정-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조”의 문제에서는 지원의 주체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지원체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부와 민간 모두 지원하고 있으나 그 흐름이 점차 민간의 참여와 주도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서

비스에 대한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정부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로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지원체계의 다른 구조적 문제-인력과 예산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은 하나센터와 정착도우미 제도, 그리고 전문상담사 제도 등을 정부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민간이 가진 취약점-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서로 상호보완 한다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착 초기의 제도적인 부분, 즉 경제적 지원, 사회보장제도 등의 생활안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민간부분은 보다 심리-사회-문화적인 실천적 적응체계로서 지역정착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민간이 지원체계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민간고유의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상호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질문은 첫째, 지원은 누구에게(대상) 어디까지(서비스내용) 지원을 해야 하는가? 둘째, 민간지원체계는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양에 대한 문제-특히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지원의 한계성에 중점을 두어 논쟁하기보단,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지원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와 “욕구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남북한 통합의 예비모델로써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은 통일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 비교적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민간의 지원체계가 비교적 그들의 욕구에 맞게 잘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민간의 서비스 지원체계들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언어적응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민간지원체계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일 것이다. 특히 언어부적응으로 인한 취업의 문제, 건강문제로 인한 취업의 문제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간지원체계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상 문제로서 민간지원은 자립·자활이라는 정부의 지원방향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지원체계는 서비스의 중복 없이 잘 조정되어 제공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착도우미제도, 전문상담사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간자원체계 등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과 자립·자활을 위한 체계이다. 우리나라 민간지원체계가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모델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방향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양자가 지역사회중심의 자립·자활 모델을 지향함은 자칫 서비스의 중복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모든 지원서비스의 포털기능을 담당하며 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정부의 자립·자활의 지원방향을 실천하려면 정부-민간의 이원적 지원주체보다는 민간영역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제 3의 영역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업-민간의 3자가 보다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민간지원체계를 구조-과정-결과 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정리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간지원체계는 민간의 참여와 주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구조적 취약점-인력과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취업문제, 언어부적응 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계는 계속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지원체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민간 서비스의 중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연대 등의 기구가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지원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되 정부와 민간의 참여만이 아닌 정부-기업-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간의 부족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10)</sup>. 둘째,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민간지원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취업을 위한 언어 등 사회 문화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부에 의하면 29개 단체 및 전국의료인연합회 소속 34개 병원과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전국망체제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의 의료적 지원체계 강화노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을 보다 높이는 인식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통일세대를 위한 준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0) 이에 대한 예로 포스코는 2011년에 자립형 사회적 기업으로 ‘송도에스이’를 설립하여 인천지역 미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미화전문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 5월 16일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 【 참 고 문 헌 】

- 김동배·이기영. (1999). 민간기관의 탈북자 지원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 3-1. 253~306.
- 김미령. (2007).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19~39.
- 김선화. (2009). 민간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스템.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엄 자료집」. 89~106.
- 김선화 · 박연희. (2007). 새터민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성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 김선화 · 윤여상 · 허영철. (201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김성모. (2008).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지원 방안.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 김윤하. (2003). 지역복지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대 학원.
- 김치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정책과 민간단체 대응전략. 「통일전략」. 3-2. 63~95.
- 김태수. (2009).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2. 305~326.
- 박현선. (2002). 탈북자의 국내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북한연구학회보」. 6-2. 209~240.
- 송근원 · 김태성. (1998).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출판.
- 신미녀 · 김병욱. (2009).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모형 개발 : 민관협력 의료 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1. 493~537.
- 오정수 · 류석진. (200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 원혜영. (2010). 10.4 남북정상회담기면 새터민(탈북자) 의식조사. 새조위.
- 윤인진 · 채정민. (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이기영 · 윤경애. (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동원 전략 : 부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103~130.
- 통일부. (2009).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개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사업.
-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 편람.
-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효과성 평가 보고서.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9). 사회복지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매뉴얼.
- Neil Gilbert & Harry Specht. (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

**정윤태** : 주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정책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2012). 현재 고려대학교 및 우송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사회정책, 사회복지



지정책이며 저서로는 건강과 복지(공저)가 있다(jyt408@naver.com).

**김원철:**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2012). 현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사회사업팀에 재직하고 있다(2001~). 주요관심분야는 의료사회사업, 호스피스, 의료사회사업행정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 교재(공저) 등이 있다(mswkwk@korea.ac.kr).

**김학만:** 공동저자. 2003년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정부 GIS사업집행의 영향요인과 전략’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정보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이며, 저서로는 「사회복지정책론」, 「정책집행론」, 「사회복지행정론」, 「저출산 고령사회의 복지정책」 등이 있고,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에 관한연구”, “지역혁신을 위한 LGIS사업집행의 실증분석”, “노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의 적절성 제고방안” 등을 발표 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평생회원, 운영이사 등을 역임하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하였다(hakman@hanmail.net).

원고접수일: 2012.3.5, 원고수정일: 2012.3.9, 게재확정일: 2012.3.13